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 “나는 이런 공천 룰 원한다”

광주시장 후보

강운태
(광주시장)



개방형 시민경선제

강운태 광주시장은 공천 룰과 관련, 경선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시민 경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 시장은 “현행 법으로도 완전 개방형 시민경선제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며 “당원 지지가 그 누구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새 정치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며 “완전 개방형 시민 경선을 토대로 광주에서부터 통합신당의 바탕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국회의원)



인물·정책 검증해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아직 창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가 경선 룰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선언문에서 밝혔듯 경선이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계파주의가 되살아나서 투명한 경선에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 통합과 혁신이 있다. 광주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선이 이뤄지도록 인물 검증, 정책 검증의 장이 있어야 한다.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의장)



통합 정신 담아야

다음주 광주시장 출마선언에 나서는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의장은 공천 룰과 관련, ‘통합의 정신’을 담은 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원 참여 경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신당이 함께 만드는 새정치연합이 실질적인 당원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100% 여론조사 경선의 경우, 인지도 조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공론조사 방식의 시민 배심원제와 박원순 서울시장 경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복수 후보 공천을

이병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기존의 정당 공천 룰을 뛰어넘는 ‘복수 후보 공천제’를 제시했다. 조만간 창당될 통합 신당이 광주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 예비 경선(컷-오프)에서 복수의 예비 후보를 선출한 뒤, 공천을 하지 않고 시민의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다. 즉, 통합신당의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지만 선거 공보 등에는 통합신당 예비경선 통과자라는 점을 명기하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지사 후보

이낙연
(국회의원)



당원의견 50% 반영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선수가 경기 규칙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새 정치를 지향하는 통합신당이라면 첫째, 새 정치답게 신선한 감동을 국민에게 드릴 만한 방식이어야 하고 둘째, 통합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전 민주당은 당원의 의견을 50% 반영하도록 하는 경선 룰을 제시한 바 있다. 당원들은 통합 이후에도 새로운 정당을 지켜낼 소중한 자산이다. 당원들이 경선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묘안을 도출해주시길 바란다.

박지원
(국회의원)



100% 국민경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공천 룰과 관련, “100% 국민 경선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3세대 신당에 합류할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없다는 점에서 전남지사 후보 공천에서 당원 참여가 포함되는 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전남지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와 호남과 통합신당에서의 역할론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박 의원은 “오는 12일께 전남지사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의원)



당원50% 국민50%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원에게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없다면 정당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정당의 공천인데 당원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측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걱정이 되지만 민주당의 전남 당원 30만명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50%가 어렵다면 10~20%라도 어떤 식으로든 당원의 의사를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록
(국회의원)



개방형 시민경선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완전 개방형 시민경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민의 직접적인 경선 참여를 높이는 한편 중앙당의 입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는 것이다. 완전 개방형 시민 경선제가 법적인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면 전남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2000명 이상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통합 신당은 공천에 있어 중앙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형
(전 합평군수)



공론 배심원제 도입

이석형 전 합평군수는 “6·4지방선거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새정치’ 실천의 첫 무대”면서 “‘새정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된 공론 배심원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공천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도민 화합을 담아야 하는 내용이 적용돼야 한다. 특히 전남은 신당 정신을 상징하는 지역인 만큼 신당 정신을 담보하는 후보 선출 방안이 필요하다.

가능한 시도지사 공천 룰 어떤 것이 있나

기존 당원을 보유한 민주당과 아직까지는 당원이 없는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창당을 앞두고 각 출마 예정자들 간 선호 경선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되는 지 여부에 따라 각 출마예정자들 사이에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원 참여 비율이 커지면 기존 민주당 후보들이 유리해지고 여론조사나 배심원제로 굳어지면 당원 영향력이 적어져 경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흔히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 ▲배심원제 ▲당원 경선 등으로 크게

나뉜다.

◇여론조사=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을 참여시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100% 국민참여경선)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강운태 광주시장, 박지원 의원, 김영록 의원의 주장하는 개방형 시민 경선제와 100% 국민경선은 당원에 게 의견을 물어 후보를 뽑자는 큰 범주로 볼 때 오픈 프라이머리에 해당된다.

◇배심원제=당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배심원단을 구성, 후보들의 정책 발표와 토론을 본 뒤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이다. 이석형 전 합평군수가 내놓은 공론 배심원제가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배심원제도 구성도 지역민 100% 참여와 다른 지역민을 포함한 배심원 구성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룰이 배심원제 50%와 여론조사 50%를 병행한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당시 광주시

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다른 지역민들이 배심원으로 포함되는데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당원 경선=말 그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의 의견만을 가지고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흔히 경선 방법은 오픈 프라이머리나 당원 경선 등 한 가지 안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경선 룰을 국민 경선 30%, 배심원제 30%, 당원 경선 40% 식으로 비율을 나눠 치르기도 한다. 이낙연·주승용 의원이 내놓은 당원 50% 반영과 당원 50%+일반국

▶여론조사

당원 여부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 참여한 조사

▶배심원제

유권자 무작위 추출, 후보 정책·토론 본 뒤 선출

▶당원경선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의견으로 후보 선출

▶박원순식 경선

여론조사+배심원+시민참여 등 복합 방식

민 50% 안이 여론조사와 당원경선 등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박원순 식 공천룰=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의장이 ‘검토할 수 있

다’고 밝힌 박원순식 공천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대했던 방식인 여론조사 30%, 지역 배심원 평가 30%, 시민 참여 40%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내놓은 예비 경선안은 컷 오프를 통해 복수 예비후보를 선정한 뒤 공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선택은 유권자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경선, 배심원제, 당원 경선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것이지, 2가지 방식 이상을 결합한 뒤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관건이며 이해득실에 따른 후보들의 입장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경선룰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상징적으로 전략 공천하거나 여성 배려 차원에서 여성 후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학교폭력과 차별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